“상속세 20% 인하시 과세기반 200조↑… 최적 세율 22%”

‘상속세 개편’ 정책 세미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
실증적 데이터 기반 개편 논의 촉구
“부자 감세가 아닌 기업·투자 감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국내 자본 유출과 강소기업의 매각을 부추겨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수 안정성과 경제 활성화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상속세율은 ‘22%’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 등은 1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무려 60%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의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개편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부자 감세가 아닌 기업·투자 감세 ”라며 “이 자리가 기업 상속세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기업 감세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회의 보완 입법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의 주최자인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개편 논의를 두고 이념과 현실의 대립을 넘어 실증적 데이터 기반의 논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故) 정휘동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사모펀드에 매각된 청호나이스의 사례와 락앤락, 쓰리세븐 등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매각 현실을 언급하며 “이런 회사들까지 전부 외국 자본에 팔려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일자리, 우리 기업들, 우리 국내총생산(GDP)를 떠받치고 있는 좋은 기업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또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잘해서 (기업을) 자녀들, 다른 사람들에 넘겨주며 계속 키워나가고 싶어 하는 이윤 동기가 인간의 본성”이라며 “이를 막으려고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보탰다.

박 의원은 “이념과 현실 논쟁은 그동안 수없이 해왔지만, 데이터를 기반한 실질적인 논쟁은 많이 약했었다”며 “오늘 세미나가 이런 실질적인 논쟁이 시작돼서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 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인하 효과’ 발표를 통해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해외 유출 자본의 잔류,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외국 자본 신규 유입 등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국내 총과세 기반이 기존 473조8700억원에서 675조5200억원으로 약 201조6500억원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수 안정성과 국내 자본 잔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형 최적 상속세율’을 탐색한 결과, 약 22%라는 수치가 나왔다.

유 교수는 “최저 구간을 봤을 때 균형형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 구간이 약 22%, 20~25% 수준에서 세수가 최대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2037년이 되면 세수가 역전이 되고 그 차이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극적으로 과세 기반이 확대돼서 국부가 유출되지 않고 해외 자산이 복귀함으로써 한국의 경제가 더 좋아지게 되고 오히려 세수도 말씀드린 대로 더 커지게 된다”고 했다.

유 교수는 높은 세율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높은 세율이) 서민이나 전 국민을 위한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상속세를 높게 가는 것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라며 “상속세를 인하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고 국부가 증가해 전 국민들 그리고 서민들에게까지 더 좋은 효익이 간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만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사무관,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metroseoul.co.kr

›› 1면 ‘“당장계약” 동탄…’서 계속

최태원 “기업이 투자·혁신 나설 수 있는 기반 마련돼야”

〈SK그룹·대한상의 회장〉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

최 회장, 예측가능한 경영환경 강조
조정식 의장 “제도·정책 뒷받침 할 것”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상공회의소 경제대도약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은 방향이 보여야 움직이는 만큼 예측 가능한 법과 제도 환경이 마련돼야 더 멀리 보고 빨리 움직일 수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상공회의소 경제 대도약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보다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지만 이를 실제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기업이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우리 경제는 반도체와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그 경쟁력을 다음 성장으로 연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AI 확산에 따른 산업 현장의 변화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AI는 사업 방식과 경쟁 규칙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며 “기업 현장에서도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시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변화를 실제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결국 기업이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투자하고 인재를 키우는 실행이 늦지 않도록 법과 제도, 환경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경제계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투자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지고 그 기회가 청년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와 경제계가 현장을 더 가까이 보고 앞으로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기업 투자와 혁신을 국회가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인사하는 일회성 자리가 아니라 경제계와 국회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만들고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의 자리”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AI, 반도체, 로봇, 에너지 등 첨단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급격한 대전환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다.

국회와 경제계의 협력 채널을 넓히자는 제안도 나왔다. 조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연결하는 협력의 틀을 갖추면 좋겠다”며 “경제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의회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의회 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주요 기업인들이 산업별 입법·정책 지원 과제를 건의했고, 조 의장은 각 건의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을 하나씩 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는 피지컬 AI·로봇 생태계 육성과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지원 등을 요청했다.

/원관희 기자 wkh@

단기 매수세 감소 전망
전문가들 “신중히 접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 여건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특히 역세권 준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젊은 실수요층이 몰리고 있다.

구리시 수택동 일대는 동탄·기흥보다 관망세가 짙었다. 장자호수공원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규제지역으로 묶인 뒤 사람들이 많이 당황스러워 한다”며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고 없이 바로 시행되다 보니 다들 멍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현장 곳곳에서는 지역 전체가 규제로 묶인 데 대한 불만도 나왔다.

부동산 관계자는 “동탄이나 기흥은 역세권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셔틀버스가 다니는 곳들이 많이 오른 것”이라며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외곽에서는 동탄, 기흥 전체가 한꺼번에 묶인 데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향후 가격 조정 가능성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갭투자가 막히면 거래가 줄며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전세 낀 매물이 시장에서 빠지고 실입주 가능한 매물이 줄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전문가들은 3중 규제로 단기 매수세가 주춤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규제와 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주춤할 것”이라며 “반도체 대기업 성과급 기대와 비규제 프리미엄이 가격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삼성전기, 내년 임직원 성과급 1200만원 이상 전망

OPI 산정기준 ‘영업이익 10%’ 변경
AI 부품 호황에 따른 실적개선 겹쳐

삼성전기 직원들이 내년에 지급받는 성과급이 1인당 1234만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기준을 경제적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의 10%로 바꾸고, AI 부품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까지 겹친 결과다.

1일 삼성전기에 따르면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OPI 산정 기준 변경 투표 결과를 사내 공지했다. 재직 임직원 1만2886명 가운데 9343명(72.5%)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9068명(97.1%)이 ‘영업이익 10%’ 방안에 찬성했다. 기존 EVA 20%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2.9%에 그쳤다.

개편된 기준은 2026년 실적분부터 적용돼 2027년 1월 지급되는 OPI부터 반영된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마련해 전 임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며, 지급 방식은 현금, 성과급 상한은 연봉의 50%를 유지한다. 이번 개편은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OPI 재원을 영업이익 10%로 바꾸기로 한 뒤,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같은 방식을 확정한 사례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와 반도체 패키지기판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5895억원이다.

이같은 전망치가 현실화하면 OPI 재원은 영업이익의 10%인 약 159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전 임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면 1인당 지급액은 약 1234만원 수준이다. 지급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던 예년과 견줘 큰 폭으로 늘어나는 규모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다른 삼성 전자 계열사의 성과급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